

광주시-제주도, 민주평화·교류 증진 힘 모은다

강기정·오영훈, 광주서 협약 체결 4·3·5·18 평화·인권 교류 등 협력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 내실화 탄소중립 기술교류·협력사업 추진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1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상생발전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와 제주가 민주평화와 교류 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시와 제주도는 지난 17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시장과 오영훈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강기정 시장이 광주시장으로는 처음 참석한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에 희생된 4·3과 5·18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공동협력'을 제안하고, 오영훈 지사가 이에 화답한 결과이다. 강 시장과 오 지사는 이날 5·18과 4·3을 상징하는 배지를 서로의 어깨기에 채워주며 우호를 다지고 양 도시의 평화를 기원했다.

광주와 제주는 민주평화와 국가균형발

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상호협력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제주4·3·광주5·18 평화·인권 교류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 내실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공동 연대 △일상 속 문화예술공

연 교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공무원 인사 교류 및 교육과정 교차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4·3 추념행사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상호 방문하고 인권

평화정책 개발, 우수사례 공유 등 평화인권 교류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광주본원과 제주본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정부지원 요구 등 공동 대응해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및 청정수소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기술 교류와 협력 사업에 상호 협력해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광주-제주 예술단 교류 공연, 지역 청년·신진예술가 교류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 교류 확대를 통해 사·도민에게 일상 속 다양한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의 발전을 상호 응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협력하고, 시도 간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협력 증진을 위해 공무원 인사 교류 및 공무원 운영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 시장은 "5·18과 4·3이라는 국가폭력을 경험한 도시라는 역사적 공통점이 있

다"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당면한 과제를 협력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평화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권·산업·문화·인사교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깊고 단단하게 결속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번 협약이 그동안의 민간 교류를 더 든든하게 받치고,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드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인 제주4·3과 광주5·18의 역사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류를 이어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하는 연대를 구축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과 오 지사는 이날 협약식 이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 교차기부 했다. 오영훈 지사는 답례품으로 명판문구(네이밍도네이션)를 선택해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좌석에 이름을 새겼다.

오 지사는 이날 민주평화대행진에 이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행안부장관에 '5·18기념공간' 국비 건의

전남지역 사적지 25곳 달해 '역사 기록·계승 공간 필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7일 진도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전남 5·18기념공간' 조성에 국비 41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됐지만 전남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항쟁에 참여했다.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장소가 목포, 나주, 화순, 해남, 함평, 영암, 무안, 강진 등 8개 시·군 75개소에 이르고, 사적지도 25곳이나 지정돼 있지만, 기념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문화센터, 5·18민주화운동교육관, 5·18 자유공원 모두 광주에 있다. 광주와 전남을 연계한 이렇듯 5·18

프로그램도 없다.

지난 2018년 전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당시 도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90.4%가 '전남에 5·18 기념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남지역 5·18 단체에서도 광주의 5·18기념공원과 같은 기념공간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전남도는 5·18기념공간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해당 연구 결과 5·18 커뮤니티센터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국비 지원도 절실한 실정이다.

김 지사는 "전남은 5·18 당시 시위대 구성 등 직접 항쟁에 참여한 민주화운동 발상지임에도 지역내 역사·기념공간이 없다"며 "5·18에 적극 참여한 전남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가치를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전남 5·18기념공간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이 지난 17일 장흥에서 국립의대 설립 관련 합리적인 방안논의를 위한 '전남도, 목포대, 순천대, 목포시, 순천시 5자 공동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 순천대와 순천시가 불참해 3자 간담회로 진행됐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의대 공모 '반쪽 회동'... "200명 배정 노력"

순천권 불참속 목포대 등 3자 진행 김영록 "과거 용역 논쟁 자제" 요청

전남도는 지난 17일 장흥에서 김영록 도지사,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홍률 목포시장 간 국립의대 설립 관련 합리적인 방안 논의를 위한 3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순천시와 순천대는 불참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대학별 모집 인원이 1500여명으로, 당초 증원 예정 2000명 중 500여명의 인원이 남아 정부가 5월 중 확정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남은 인원 내에서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200명을 배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5인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해보고자 했는데, 순천대와 순천시에서 참석하지 않아 대단히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지난 16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잘 된 것으로, 정부가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여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5월 중 확정하는 대입전형시행계획 마련 과정에서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받도록 전남도, 목포대·순천대, 목포시·순천시, 5자가 함께 노력하고, 정부 관계부처에 함께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2021년 전남도 추진 용역 공개와 관련 해선 "비공개 의혹을 해소하고, 일부에서 제기한 용역 공개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 전남도가 심사숙고해 공개를 결정한 만큼, 양 대학과 양 지역에서 과거 용역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무한한 경쟁과 인내로써 양 대학, 양 지역과 함께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더 만나서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용역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으니 용역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곽지혜 기자**

광주시, 3대 사망사고 제로화 시민실천단 모집

광주시는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등 3대 안전 취약분야 사망자 제로화를 위한 시민실천단을 오는 21일부터 6월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지가 광주광역시인 광주시민이며, △교통 35명 △자살 70명 △산업재해 87명 등 총 192명을 모집한다. 단 자살분야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시민실천단은 5월부터 △교통안전 인식개선 활동 △교통안전테마 집중 캠페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생명존중 인식개선 활동 △사업장 산재예방 활동 등 분야별 안전문화 실천 활동에 참여한다.

광주시는 시민실천단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활동방식을 다양화한다. 안전신문고 앱, 전동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96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생활터 내 시민 밀착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실천단 참여 희망자는 21일부터 6월 14일까지 광주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안전은 우리 모두가 협력해 지켜야할 최우선 가치"라며 "3대 안전취약 분야 시민실천단 참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가 실현되도록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3대 안전 취약 분야 사망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를 구성했다. 운동본부는 정책방향 자문을 담당하는 '정책지원단'과 시민안전 인식개선 및 실천활동을 전개하는 '시민실천단' 등 2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제1기 시민실천단은 총 24회에 걸쳐 △사고다발지역 교통안전 모니터 △자살예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포터즈 활동 △산재 취약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펼쳤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2월 호우피해 복구비 20억 확정

전남도는 지난 2월 호우 농작물 피해 복구비로 20억원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월19일까지 이틀간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13개 시·군, 1168농가(2147ha)에 대한 피해 복구비

다. 도는 농가의 경영 안정과 빠른 복구를 위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별 피해 면적은 강진 676ha, 장흥 622ha, 영광 339ha, 해남 247ha, 고흥 161ha 등이다. 품목별로는 보리 1171ha, 귀리 460ha, 밀 204ha, 양파 104ha 등이

다. 피해 농가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 등을 지원받는다. 농약대는 보리 등 일반 작물은 1ha당 100만원, 양파, 마늘 등 채소류는 250만원이다.

이번 피해 복구비와는 별도로 보험 가입 농가는 현장 조사와 심사를 거쳐 농작물 재해보험금도 지급 받는다. **곽지혜 기자**